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연구 요약문(Executive Summary)

2025. 10.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INPOM

Institute of Non-Profit Organizations Management

비영리경영연구소

I. 연구 개요

구분	내용
연구목적	비영리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질문	- 우리 사회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에 기반한 비영리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비영리 일자리는 어떻게 정의되고, 그 규모는 어떤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 비영리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고용 불안정, 낮은 처우, 사회적 인정 부족 등)는 무엇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가? - 국내외 공익활동 및 비영리 일자리 지원정책의 주요 사례는 무엇이며, 이를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연구내용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의미와 범위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일자리 규모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 비영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비영리의 경기도 GRDP기여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 규명 - 경기도 및 국내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 분석 및 진단 - 국내외 비영리 일자리 지원정책 사례 비교 - 경기도 및 한국 비영리 일자리 여건 및 정책의 한계와 대안 마련 방향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충 정책 제안
연구기간	2025년 6~10월
연구범위	5년 이내 / 경기도 내 일원
연구방법	문헌연구, 현황조사, 사례연구, 이차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대화 등

II.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 비영리 일자리 조작적 정의

구분	정의
포괄적 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실체적 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의미. 이는 자원봉사나 임시 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 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직업 활동

☐ 비영리 일자리 구성요건

구성요건	설명
목적	개인이나 조직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과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돌봄, 시민참여 증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심을 둠
특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율성
범위 (조직형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 특수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등 포함 *정부 기관(GO)이 아닌 조직(NGO)이면서 수익추구 조직(PO)이 아닌 조직(NPO) *수익 활동을 하지만, 수익 추구가 주목적이 아닌 조직 포함 *잉여금의 분배 제한과 지역사회 귀속(공익사업 사용 및 지역사회 기여)을 규정하는 사회적경제 포함
노동관계	일정한 보수를 받는 유급 고용 형태이며, 계약직·정규직·시간제 등을 포함하되, 자원봉사·인턴십 등 무급 활동은 제외
고용조건	지속가능성과 생애 경력 설계를 고려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사회적 위치	시장(영리)과 국가(공공)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공익적 의제 설정, 주창(advocacy) 활동,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Ⅲ.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

□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 요약

구분	내용
추진경과 및 한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제2기 시민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를 전략 과제화하여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과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2025년에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합지원체계로 재편 → 도정의 일자리 정책과 결합하지 못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단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됨.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안정성 문제, 그로 인한 정책적 효과성에 있어 취약함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일자리 정책 전반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설계 → 비영리 영역은 여전히 제도적·관행적으로 배제됨 -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고용연계형 사업인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은 비영리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로 청년의 지속 고용이 어려워 사실상 참여 불가 → 고용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지원 구조 필요
시사점	(비영리 일자리 정책성 재정립) 고용연계형 일자리 정책은 비영리단체 운영 현실에 부적합함. ‘일체형’ 또는 ‘사회적 가치 기반 보상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과 같은 공익형 직접 일자리 유형이 비영리 영역과 높은 정책적 친화성을 가질 수 있음 (참여 대상의 다양화와 확대 필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실제로 중장년층의 고용유지율과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임. 시민사회 활동이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 구축)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제로 접근해야 함. 이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 (시민참여형 기회소득 모델의 도입 필요) 공익활동의 저변 확대와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을 특정 활동가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기회소득’ 모델도 필요함 (제도적 진입장벽 해소와 법령 개정 필요) 많은 일자리 정책에서 명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비영리스타트업은 공익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직으로서 잠재력이 크지만, 대부분 인건비와 공간 등 기본적인 운영 기반이 부족함. 운영비 사용을 허용하는 민간 임팩트 투자 사례를 고려하여 공적 재원도 유연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소결) 경기도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력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IV.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요약

범주	주제어	핵심 내용	시사점
실태	비영리 일자리 현황	자립적 구조 부족, 지원정책 부재, 일자리 생성 기회 부족	장기 지원 구조 및 지속성 기반 정책 설계
	비영리단체 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수직적 권위 문화, 리더 의존형, 중간관리자 육성 부재	조직문화 개선, 중간관리자 교육 체계 강화
	활동가의 삶과 동기	사명감 높으나 소진·생계 곤란, 이탈률 높음	생애주기별 설계와 생활 안정 시스템 구축
인식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중요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재 인식과 제도적 보상체계 마련
	비영리 일자리 인식	자원봉사와 혼동, 임시직 인식	진로 교육·사회적 홍보 강화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법적 정의·분류 체계 미비	법적 지위 확립, 제도 기반 강화
조건	괜찮은 일자리의 의미	의미·안정성·성장성 부족	평가 체계 마련, 조직문화 개선
	비영리 일자리 안정성과 조건	계약직/단기 일자리 중심, 재정 구조 불안	지속가능한 구조적 고용 흡수 시스템 설계
변화	정책 및 제도 변화	수익금 규제, 보조금 중심, 지속성 부족	법제도 정비, 규제 완화
	공공(정부/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권한 제한, 협력체계 미흡	정책 집행력 강화, 거버넌스 제도화
	세대별 접근	진입 장벽, 경력 전환 제약	경력 주기별 정책 도입, 보장 논의
	시민사회 변화 전략	디지털 전환, 신뢰 회복 필요	자정 노력 및 조직모델 실험

V.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구분		내용
비영리 부문 규모	사업체	• (2022년) 156,333곳(전체의 약 5.01%) • (2023년) 163,482곳(전체의 약 5.01%)
	사업체 종사자	• (2022년) 624,161명(전체의 약 12.45%) • (2023년) 670,938명(전체의 약 13.14%)
경제적 기여 (’22)	사업체 매출	• 117조 7,193억 4,400만 원(평균 16억 1,105만 원)
	생산유발	• (생산유발효과) 약 192조 2,425억 원 • (생산유발계수) 1.633
	고용유발	• (고용유발효과) 778,589명 • (고용유발계수) 6.614
	부가가치유발	• (부가가치유발액) 약 84조 2,914억 원 • (부가가치유발계수) 0.716
	GRDP	• 경기도 GRDP의 14.35% (경기도 GRDP 587조 3,286억원 중 비영리부문은 84조 2,914억원)
시사점	지원의 우선순위 고려	• 비영리부문 중 업종코드‘S. 협회, 단체, 수리,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많지만, 종사자 수는 0.4명으로 열악. 성장 방해요인을 파악하고 지원의 우선순위에 반영
	지역 편차 고려	• 전체 사업체 중 경부권(수원,용인,성남,안양,안성,군포,의왕,과천) 약 31%, 동북권(남양주,양평,구리,가평) 약 9%로 지역 편차가 큼. 지역 편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고른 발전 도모
	연구 과제	• 비영리부문 내 영향 비교연구, 추이연구 등으로 확장
	정책 과제	• (데이터 보완) 통계청을 중심으로 외부 조사자료를 기업통계등록부에 결합.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부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업통계등록부와 연결하는 방안 고려 • (연구지속성 확보) 경기통계 내 비영리부문 섹션 구성 및 통계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통계의 정책활용도 제고 및 연구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검토

VI. 해외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정책 사례

□ 해외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 요약

접근 방식	사례와 시사점
재정지원 정책	• 미국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일본의 주민세 1% 지원제도와 폴란드의 백분율 제도 등 →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간접 지원 • 한국도 재정지원 체계를 단순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세제 연계제도나 안정적인 간접비 보전 장치마련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생계 안정과 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사회적 인정 제도	• 상호호혜적 시스템인 타임뱅크,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여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네이버후드 매칭펀드, 일정 요건을 갖춘 인정NPO법인 제도(일본) 등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공식화 • 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지위를 ‘국가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한국 상황을 고려, 비영리단체를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 있음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운영	• 미국 Idealist, The Council on Foundations, 영국 CharityJob 등 → 전문화와 맞춤형 매칭, 부가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요인 • 국내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적용할 경우, 단순한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맞춤형 매칭, 데이터 기반 인재 관리, 커뮤니티 구축 등 실질적 운영 전략과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의 다변화,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제도화, 그리고 비영리 일자리 정보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플랫폼 구축 등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 있음	

Ⅶ.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제안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체계도

근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비전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조성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		
슬로건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목표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및 시민사회 활성화 실현		
3대 추진전략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9개 추진과제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 연대기금 조성
16개 세부사업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 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기존사업 확대)청년/스타트업 지원, 역량강화 • (신규사업 개발)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1-3-2.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직접조사)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2-3-2. 기회소득 지급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마련

※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	-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산업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 비영리 일자리야말로 옹호 활동, 돌봄, 환경, 문화, 인권 등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임 -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표방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자리 정책과 지원사업에 비영리 일자리를 고용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영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중 사회적경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중심으로 도내 26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금융지원, 판로지원, 창업 및 도약 지원 등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은 대부분 빠져있음.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2015.08.제정)」의 경우 비영리단체를 고용 창출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와 복지, 서비스 분야에 치중되어 비영리 부문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며 정책 실효성도 낮음 - 이에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독립적인 조례를 통해 보조금과 같은 ‘사업’ 단위 지원을 넘어, ‘사람’ 중심의 중장기적 비전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목적) 경기도 차원에서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공익적 일자리를 확대 - 주요 내용 ㉠ 비영리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근거 마련 ㉢ 비영리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담기구 및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설치 근거 ㉤ 예산 지원, 교육·훈련, 연구조사, 성과평가 등 포함
추진계획	1단계(’26) : 조례 제정(안) 마련 및 현장 의견 수렴 2단계(’27) : 조례 발의 →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공포 → 조례 제정 및 시행/「비영리 일자리 창출·촉진 종합계획」 수립
성과평가	단계별 이행 여부, 달성률
기대효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육성 및 경기도 공익활동 기반 강화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	• 현행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비영리 일자리 부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비영리 일자리를 조례상 ‘보조적 사항’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활동가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함 * 현행 조례의 한계 <table border="1"> <tr> <td>제2조(정의) 6항 :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td><td>➤ 일자리 성격·범위 구성 부족</td></tr> <tr> <td>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td><td>➤ 종합적 정책방향·지원체계·평가 체계 미흡</td></tr> </table> 비영리 일자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마련해야 함	제2조(정의) 6항 :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 일자리 성격·범위 구성 부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종합적 정책방향·지원체계·평가 체계 미흡
제2조(정의) 6항 :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 일자리 성격·범위 구성 부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종합적 정책방향·지원체계·평가 체계 미흡				
사업개요	• 개정 방향 ① 기존 조례의 성격 유지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포괄 목적이므로, 비영리 일자리는 공익활동의 기반 요소로 보완 ② 독립 조례와의 차별화 : 독립 조례(비영리 일자리 조례)는 비영리 일자리 자체를 주제로 한 종합지원·촉진 법제, 개정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시민사회 정책안에서 비영리 일자리를 ‘연계·통합 지원’하는 역할 • 보완 내용 ① 정의 조항 보강 - 현행 : “공익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 개정 : “공익활동 수행 과정에서 창출되며, 지속가능한 고용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로 확장 → 지속가능성·전문성·사회적 가치 강조 ② 기본계획 조항(제6조) 확대 - 현행 : “지원 및 정보 제공” - 개정 : 비영리 일자리 창출·육성 전략 포함,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명시, 경력 개발 지원 추가 등 ③ 지원 조항 신설 -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제도(인증·포상) 근거 포함 ④ 협력·연계 조항 신설 - 경기도 일자리 정책,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정책 연계 의무 규정 - 시·군, 민간단체, 기업과의 협력 체계 명시				
추진계획	• 1단계(’26) : 개정안 마련 → 발의 →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공포 → 조례 제정 및 시행				
성과평가	• 단계별 이행여부, 달성률				
기대효과	• 비영리 일자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공익활동가의 고용안정,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인정 제고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필요성	- 경기도 내 기존 일자리 정책은 주로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비영리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배제됨. 이로 인해 동일한 고용 창출 효과를 내더라도 비영리단체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활동가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임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창출하는 비영리 일자리를 '정상적인 일자리'로 인정하고, 비영리단체가 고용 창출의 주체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사업개요	(목적) 기존 고용지원, 고용유지, 고용장려 정책에 비영리단체를 고용 주체로 명시하여 비영리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주요 내용 ① 경기도 일자리 종합계획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일자리 포함 ②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에 준하는 비영리 일자리 지원 확대 ③ 경기도 주요 인건비 지원 사업인 '경기 중소기업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등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명시
추진계획	1단계 ('26) :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경기도 일자리 종합계획에 비영리 부문 포함, 기존 지원사업에 비영리 고용 주체 참여 항목 신설 2단계 ('27) : 기업형 사업과 구분된 비영리 맞춤형 성과 지표 개발 - 공익성, 사회서비스 제공 효과 등 비영리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 -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 분석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확대 적용
성과평가	-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포용 여부 건수 - 경기도 일자리 정책 내 비영리 부문 예산 증감액 - 비영리 부문의 GRDP 기여도, 공동체 삶의 질 향상 기여도
기대효과	- 비영리단체가 안정적 고용 창출 주체임을 제도적으로 인정 - 기존 일자리 지원사업의 포용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형평성 제고 - 기업·비영리 상생 구조를 형성하여 도내 일자리 생태계 다변화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필요성	- 경기도 일자리 활성화 5대 전략 중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대상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일자리 정책이 주로 민간기업(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업자의 다양한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 취업 취약계층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돌봄·문화예술 등에서 비영리단체는 주요 고용처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정책에 비영리단체를 제도적으로 포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사업개요	• (목적)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비영리 일자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 • 주요 내용 ① 대상별 일자리 사업의 고용처를 기업 + 비영리단체로 확대 ② 청년 인턴십, 여성 재취업, 중장년 경력전환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에 비영리단체 참여 허용 및 지원 강화 - (청년)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 : 중소기업 한정 → 비영리 확대 - (청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 민간형 사회적경제조직 한정 → 비영리 확대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단기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인적 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비영리와의 친화성이 높은 정책임 - (청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복지포인트(비영리 포함) → 비영리 가능 홍보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 비영리 확대 - (청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 배제 → 프로젝트형에 시민사회 포함 - (중장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 비영리법인 포함 → 비영리 가능 홍보 - (중장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중소중견기업 한정 → 비영리 확대
추진계획	• 1단계 ('26) : 제도 기반 마련 및 참여 확대 - 대상별 일자리 사업 지침 개편 → ‘비영리단체 참여 가능’ 항목 반영 - 비영리단체를 고용 주체로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정책 참여 확대 • 2단계 ('27) : 맞춤형 직무 설계 및 연계 강화 - 비영리 맞춤형 직무 설계 : 청년-디지털, 홍보, 조직운영/여성-돌봄, 문화기획/장년-자문, 멘토링 등 - 연계 프로그램 운영: 도내 대학,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등과 협력한 매칭 지원 -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적용 • 3단계 ('28) : 도 전역으로 단계적 확산 시행
성과평가	• 대상별 비영리단체 취업자 수 및 고용 유지율 • 참여자의 직무 역량 향상, 경력 전환 효과 • 사회서비스·지역문제 해결 사회적 성과(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공익적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 •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포용성 강화 및 비영리단체의 고용 주체로서 위상 제고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필요성	• 행정(지자체)을 포함한 정책 담당자의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제도 설계 및 지원 과정에서 비영리 영역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 일반 시민 또한 비영리 일자리를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원봉사나 단기 활동과 혼동하는 경향이 큼 • 비영리 일자리의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제대로 알리고, 초중고·청년·여성·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비영리를 실제 경력과 직업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 (목적)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체험·홍보 활동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 • 주요 내용 ①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② 청년·여성·장년층 대상 비영리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 초중고 진로체험 교육에 비영리 연계, 대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 50+/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에 비영리 연계 ③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 비영리 이해 교육 추진
추진계획	• 1단계('26) - 비영리 일자리 홍보 캠페인 기획 및 시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영리 인식 제고 교육을 경기도 공무원 정기 교육과정에 포함 • 2단계('27) : 도내 대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년취업센터 등과 협력해 체험·매칭 프로그램 확대 • 3단계('28) : 홍보 콘텐츠 정례 제작 및 프로그램 확산
성과평가	• 홍보 캠페인 횟수,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수, 콘텐츠 조회수·노출도 •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사전·사후 조사), 정책 수요 증가, 공무원 및 시민의 이해도 개선
기대효과	• 행정 및 시민의 인식 전환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가 ‘정상적인 일자리’로 인정되는 사회적 기반 마련 • 초중고, 청년, 여성, 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참여 확대를 통한 비영리 인력 풀(pool) 확보 •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포용성과 다양성 강화, 공공적 가치 중심의 고용 모델 확산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1-3-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 실시(직접조사)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필요성	- 국가통계 및 기존 행정자료에서는 비영리 일자리 규모가 별도로 파악되지 않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부족함 -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자료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비영리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목적) 비영리 일자리 통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내용 ㉠ 기업통계등록부(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연계된 기업 및 사업체 단위 자료) 활용 경기도 내 비영리 규모 추계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의 GRDP 기여도 측정,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도출 ㉢ 경기통계와 연계한 비영리 통계 구축 : 산업·직종별, 연령·성별, 지역별 비영리 일자리 현황 분석 ㉣ 매년(또는 2년 주기) 통계집 정기 발간
추진계획	1단계('26) : 정례 조사를 위한 통계 체계 구축 2단계('27) :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집 발간 3단계('28) : 자료 업데이트 및 분석 보고서 발간
성과평가	발간 횟수, 통계 세분화 정도, 데이터 활용 기관·정책 반영 사례
기대효과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객관적 기초자료 확보 - 정책 설계와 연구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1-3-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 실시(직접조사)

필요성	- 통계자료만으로는 일자리 질, 종사자 처우, 역량개발 수요 등 세부 현황 파악이 어려움 - 현장 맞춤형 정책을 위해서는 직접조사를 통한 심층적 자료 확보가 필요함
사업개요	(목적) 비영리 일자리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 및 대응 - 주요 내용 ㉠ 경기도 내 비영리단체 및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심층면접 실시 ㉡ 고용형태, 임금 수준, 경력개발, 직무 만족도, 근로환경 등 파악 ㉢ 정책 수요 및 개선 필요 사항 조사 ㉣ 매년(또는 2년 주기) 실태조사 결과 정기 발간
추진계획	1단계('26) : 정례 조사를 위한 조사 체계 구축 2단계('27) : 정례 실태조사 진행, 조사결과 보고서 발간 3단계('28) : 자료 업데이트 및 분석 보고서 발간
성과평가	조사 응답 단체·종사자 수,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학술·연구 활용 건수
기대효과	- 비영리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 - 근거 기반 정책 설계 가능 - 활동가 처우 개선 및 비영리 고용 안정화 지원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 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기존사업 확대) 청년/스타트업 지원, 역량강화 - (신규사업 개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 기구 설치(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필요성	• 현재 비영리 일자리는 경기도 일자리 정책 내에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사)경기시민연구소 올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개별 사업 단위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책의 큰 공백과 비영리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사업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장기적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전담 조직이 부재하여,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연구·통계·상담·교육·플랫폼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함
사업개요	• (전담 기구 설립 목적) 경기도 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단체와 활동가 및 새롭게 진입하는 시민들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비영리 일자리 정책 연구 및 통계집 발간 ②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운영 - 공익활동가 직무개발 및 경력개발 체계 구축 - 직무개발 : 직무 관련 교육, 훈련,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직무 순환 등을 통해 역량을 개발 - 경력개발 : 활동가 개인의 장기적인 목표와 자아실현을 위해 직무 경험, 학습,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③ 일자리 정책과 지원사업 연계 및 통합 조정 ④ 일자리 관련 기관 네트워킹 및 협업
추진계획	• 1단계('26) : 조례 제정 및 행정 근거 마련, 운영계획 수립 • 2단계('27) : 센터 개소, 인력 구성, 시범 운영 프로그램 개시 • 3단계('28) : 기능 확장(정책 연구, 교육, 플랫폼 강화), 거점센터 확대 운영
성과평가	• 센터 이용 건수, 정책 반영 실적, 교육·상담 참여자 수, 네트워크 활성화 지표
기대효과	• 비영리 일자리 지원의 전문성·체계성 확보, 정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필요성	• 현재 비영리 일자리 지원은 공공정책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고, 민간영역에서는 청년·스타트업·역량강화 등 사업 단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규모도 작아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만족도 및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음. 특히, 지원사업의 기간 및 예산의 한계로 참여자의 장기적 경력 개발이나 안정적 일자리 유지에는 한계가 큼. 따라서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을 비영리일자리센터(가칭)와 같은 거점기관을 기반으로, 원스톱으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상별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진로탐색·역량개발·경력전환·사회공헌 활동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기회와 정보 제공, 그리고 수요-공급 간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현재 국내에는 비영리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제공매칭하는 공식 플랫폼이 부재하며, 일부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연대조직(협회·협의회 등)의 게시판을 통한 채용공고 게시가 전부인 실정임.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비영리 일자리 포털의 구축이 시급함
사업개요	• (목적) 단기·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주요 내용 <기존사업 확대 및 연계> ①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 주민참여예산 → 본예산 변경, 예산 증액, 청년 → 모든 대상으로 확대 ②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23년부터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 중) : 신규 발굴 및 성장지원 확대, 신뢰 기반 지원 방식 유연화(인건비와 공간제공), 인큐베이팅 역량 강화, 비영리 스타트업 성과측정 및 사례집 발간 <신규사업 개발>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생애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비영리 경력 경로(career path)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진로탐색→역량개발→경력전환→사회공헌) - 청년 : 진로 탐색, 인턴십·훈련 기회, 취업 연계 프로그램, 장기적 일자리 지원 - 중견 : 번아웃 예방 및 지원, 경력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안정적 근로 조건 마련, 리더십 교육 제공 - 시니어 : 조직 경영 역량, 정책·재원 확보 능력 강화 교육, 은퇴 후 사회적 기여 일자리 제공(멘토링, 컨설팅), 공적 보상(기회소득 지급, 고용보험 지원) - 경력 단절자, 재취업 희망자 : 재교육, 멘토링 제공 ②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 채용정보, 인재풀 확보, 교육·연수, 네트워킹 등 - 경기도일자리포털(잡아바), 경기청년포털, 경기도일자리재단*워크넷 등과 연계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추진계획	• 1단계('26) : 기존사업 분석, 통합 운영 방안 설계, 신규사업 기획 • 2단계('27) : 통합 운영 본격화, 온라인 플랫폼 시범 운영 • 3단계('28) : 플랫폼 고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원 대상 확대
성과평가	• 참여자 수, 일자리 매칭률, 고용 유지율, 플랫폼 활성화도
기대효과	• 맞춤형 지원 강화, 장기적 고용안정 및 생태계 지속성 확보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필요성	공익활동가는 열악한 근로조건, 장시간 노동, 낮은 보상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번아웃과 이직률이 높아 장기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큰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검진, 심리상담, 휴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사업개요	(목적) 공익활동가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정기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비 일부 보조 ㉡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쉼 캠프, 안식월 등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 ㉣ 협력기관(의료·심리·휴양시설) 연계
추진계획	1단계('26) : 건강 및 쉼 수요조사, 협력기관 발굴, 시범사업 운영 2단계('27) : 건강검진 지원 확대, 쉼 프로그램 정례화, 상담 인프라 강화 3단계('28) : 제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효과 분석 및 개선 반영
성과평가	건강검진 참여율, 심리상담 이용 건수, 번아웃·이직률 개선 지표
기대효과	건강한 일터 문화 확산, 공익활동 지속가능성 강화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필요성	비영리단체 상당수가 열악한 사무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활동가의 업무 효율성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특히 임대료 부담과 안전관리 미흡은 단체의 운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안정적 공간과 안전한 작업환경 지원은 비영리 활동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
사업개요	(목적) 비영리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조직 역량과 활동 성과를 제고함 - 주요 내용 ㉠ 공공 유휴공간 발굴 및 제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경우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국유·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공유오피스 및 협업공간 조성 ㉢ 시설 보수 및 안전장비 지원 ㉣ 공간 운영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추진계획	1단계('26) : 유휴공간 조사·발굴, 시범 매칭 2단계('27) : 공유오피스 조성, 시설 개선 지원 본격화 3단계('28) : 지원 단체 확대, 안전관리 제도화, 성과 모니터링
성과평가	지원 단체 수, 공간 활용률, 안전사고 감소율
기대효과	안정적 근무환경 확보, 협업 활성화, 활동 효율성 증대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2-3-2. 기회소득 지급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필요성	•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활동가들은 활동의 지속성과 활동가의 자존감 고취, 활동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도입이 필요하며,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인정, 공익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등 경제적·비경제적 보상을 요구해 옴(박영선, 2024) • 그러나 공익활동가의 경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타 직종 전환 시 불리하게 작용하고, 활동 지속성을 저해함. 또한 활동 성과가 사회적 자산으로 기록·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활동을 정식 경력으로 인정하고, 활동 시간과 성과를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함
사업개요	• (목적) 공익활동가의 경력과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활동 지속성을 높이며 타 분야로의 경력 연계를 촉진함 • 주요 내용 ①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포함) ② 공익활동 이력제 도입(활동이력 기록 및 발급)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이력 관리 시스템, 경기마풀(MAPOOL, 경기도마을활동가Pool) - 활동 경력 기반 정부 및 공공부문 진입 기회 부여 - 마일리지·타임뱅크 운영(활동 시간을 사회적 보상으로 환산) *미국 타임뱅크 시스템은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연계되어 있으며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타임뱅크로 환산하여 지역사회 선순환 체계 구축 *미국 네이버후드 매칭펀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비영리단체의 자부담을 타임뱅크로 연동하여 다양한 참여 구도를 마련, 보조금 지원 규모와 산출 가치를 다양화 ③ 공익활동가의 날 지정 및 포상 제도 도입 *미국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 : 미국 연방 및 주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 및 지원책, 자원봉사상 수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있음 ④ 공익활동의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추진계획	• 1단계('26) : 제도 설계, 법·행정 근거 마련, 온라인 시스템 구축 • 2단계('27) : 공익활동 이력제, 마이리지·타임뱅크 시범 운영 • 3단계('28) : 제도 정착 및 활용도 제고, 타 부문 취업 연계 강화
성과평가	• 경력 인증 • 발급 건수, 활용 사례, 제도 이용률
기대효과	•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확대, 경력 개발·고용 연계 강화

2-3-2. 기회소득 지급

필요성	• 기회소득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보상되지 않지만,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큰 활동에 대해 공공정책 차원에서 보상하는 소득을 말함.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성격이 강함 •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고용 확대나 산업 혁신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민선 8기 대표 정책으로 '기회 소득'을 추진하고 있음. 단순한 복지나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종사자,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활동가는 정작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기회소득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며, 고용 이외의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이 될 수 있음. 공익활동가들은 안정적 소득 기반이 부족하여 장기적 활동에 어려움을 가지며, 특히 청년 및 경력 활동가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비영리 분야 유입 및 지속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임. 따라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할 때 공익활동가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활동 기반 강화 및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사업개요	• (목적) 공익활동가에게 기초적인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하여 공익활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함 • 주요 내용 ① 활동 지속성·기여도 기준 충족 시 기회소득 지급 ② 지급대상 선정 및 지원금 수준 설정 ③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 분석 후 제도화 추진 ④ 사회적 기여도와 연계한 성과 기반 지원 체계 구축
추진계획	• 1단계('26) - 제도 기반 구축 - 대상·기준 마련, 재원 확보, 시범사업 설계 - 시범사업 시행,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 • 2단계('27) : 지원 대상 확대, 지급체계 고도화(월 단위 활동소득 보전) • 3단계('28) : 기존 일자리 정책과의 중복성 줄이고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 정책효과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모델 확산
성과평가	• 기회소득 수혜자 수, 활동 지속률, 생활 안정성 변화
기대효과	• 활동가 생활 안정 보장, 장기적 공익활동 기반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요성	-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정책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며, 일부 관련 정책 또한 소수의 사업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 조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조건에서는 비영리 영역이 가진 사회적 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행정과 현장 간의 정책적 괴리가 심화할 수밖에 없음 - 비영리 부문은 공공·민간·시민사회가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공식적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며,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전담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시급함. 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책 기획·심의·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요구와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기구로 기능해야 함
사업개요	(목적)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논의와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의·조정기구 마련 - 주요 내용 ㉠ 경기도 차원의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 구성 : 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등 ㉢ 기능 : 정책 자문·심의, 과제 발굴, 사업 점검 및 제안
추진계획	1단계('26) :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위원 위촉 및 운영 규정 수립 2단계('27) : 정례회의 개최(분기별), 정책 제안 및 시범사업 검토 3단계('28) : 제도화 및 상설기구화 논의, 중앙정부 연계 협력
성과평가	- 위원회 운영 횟수 및 참여자 수 - 정책 제안 건수 및 채택률 - 위원회 제안 기반 신규사업 도입 건수
기대효과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공식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책 실행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 수립 가능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 자리 모델 확산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 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필요성	- 경기도 내 14개 시·군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에서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정의와 지원 근거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용인시만 비영리 일자리 언급, 광명시와 평택시는 사회적 지지와 인정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임. 이로 인해 각 시·군이 비영리 일자리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어려우며, 예산 확보나 정책 연속성도 제한받고 있음. 특히 지역 청년과 시민들이 비영리 영역에서 일할 기회를 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따라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임
사업개요	(목적) 시·군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항목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시·군 조례 개정 지원 및 표준 조례안 제시 ㉡ 비영리 일자리 관련 조항(정의, 지원 범위, 예산 지원 근거 등) 포함 ㉢ 시·군 단위 사업 모델(일자리 매칭, 인턴십, 청년활동 지원 등) 확산
추진계획	1단계('26) - 표준 조례안 마련, 시·군 대상 컨설팅 및 협의 착수 - 시범 시·군 조례 개정 완료, 관련 시·군 사업 시범 운영 2단계('27) : 전 시·군 확산 추진, 조례 적용 기반 사업 확대
성과평가	- 조례 개정 시·군 수 및 비율 - 조례 기반 신규사업 수 - 참여 단체·활동가 수
기대효과	- 시·군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정책 기반 확보 -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다양화 → 지역 청년·전문인력 유입 촉진 -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 기여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 사회연대기금 조성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마련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마련

필요성	- 비영리 일자리 지원 정책은 공공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와 사업별 단년도 예산 편성으로 인해 안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비영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자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 마련 전략이 필요함. 특히 기업·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 지역 재단과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민간 주도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점차 무르익고 있음 - 따라서 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 스스로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를 지탱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사업개요	(목적) 지역재단 형태의 민간 중심의 자발적 기금 조성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지원의 자원 다변화 주요 내용 ㉠ 경기사회연대기금 TF 구성(기업, 금융권, 비영리단체, 학계, 지자체 등 참여) ㉡ 기금 조성 방안 연구(공공 매칭펀드, 기부금 세제 혜택, ESG 연계 등) ㉢ 운영계획안 마련: 기금 운영 주체, 배분 기준, 모니터링 체계 *부산형사회연대기금 파랑저금통 ‘공익활동가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20년~’22년) - 부산·경남·울산 지역에 설립·등록되어 있으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NPO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인건비), 3년간 총 25개 단체 참여 *뉴욕시 Nonprofit Resiliency Fund 비영리 고용지원 - 뉴욕시가 민간재단과 함께 조성한 비영리단체 지원기금. 비영리단체 재정 안정, 고용 유지, 전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추진계획	1단계(’26) : TF 구성,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시범 모금 추진 2단계(’27) : 기금 법인 또는 재단 설립 검토, 초기 기금 조성 시작 3단계(’28) : 기금 본격 운영(인건비·운영비 직접 지원, 사회적 가치 사업 배분)
성과평가	- TF 운영 횟수 및 참여기관 수 - 조성 기금액 및 참여 기부자 수 - 기금 기반 지원사업 수 및 수혜 단체·인원 수
기대효과	- 공공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자원 확보 -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사회적 연대 강화 - ESG·기부문화 활성화와 함께 지역 기반 비영리 생태계 강화

※ 추진계획

- 향후 3개년 간 단계별로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비영리 일자리에 투자하였을 경우, 생산유발효과 약 489.9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198.42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14.8억 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한 GRDP 기여율은 0.00366%로 예측됨. 이러한 기여율은 지역 거시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미미한 수치로 보이지만, 비영리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예산 투입의 규모가 클 수록 고용 유발에 있어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추진 로드맵

구분	단계별 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2026	2027	2028	3개년
	최종수요 투입 예산 ('22년 기준 적용)	100억	100억	100억	300억
경기도 비영리 규모 및 경제적 효과	비영리 사업체 수 156,333곳(경기도 사업체의 5%)				
	비영리 종사자 수 624,161명(경기도 고용의 12.45%)				
	비영리 매출액 117조 7,193억 4,400만 원				
	생산유발효과 약 192조 2,425억 원 (생산유발계수 약 1.633) 10억 원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16.33억 원 생산 유발	163.3 억 원	163.3 억 원	163.3 억 원	489.9 억 원
	고용유발효과 778,589명(고용유발계수 6.614) 10억 원 상품 생산 시, 고용이 약 6.6명씩 증가	66.14 명	66.14 명	66.14 명	198.42 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4조 2,914억 원 (부가가치유발계수 0.716) 10억 원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7.16억 원 부가가치 창출	71.6 억 원	71.6 억 원	71.6 억 원	214.8 억 원
	경기도 GRDP 기여도 14.35% 비영리부문 부가가치 84조 2,914조/ 경기도 GRDP 587조 3,286억 원	0.00122 %	0.00122 %	0.00122 %	0.00366 %

연번	3대 추진전략(9개 추진과제, 16개 세부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유형
		2026	2027	2028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		신규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계속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	●		신규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	●	●	신규/계속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	●	●	신규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	●	●	신규
	1-3-2.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직접조사)	●	●	●	계속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	●	●	신규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	●	계속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	●	●	계속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	●	●	계속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	●	●	신규/계속
	2-3-2. 기회소득 지급	●	●	●	신규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신규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포함 명시	●	●		신규/계속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마련	●	●	●	신규

● 추진과제별 소관부서

연번	3대 추진전략(6개 추진과제, 16개 세부사업)	소관부서
----	----------------------------	------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1-3-2.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직접조사)	경기통계, 경기도일자리재단, 센터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센터, 시·군센터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2-3-2. 기회소득 지급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시·군센터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시·군, 시·군센터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마련	센터,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VII. 결론

구분	주요 내용	정책적·학술적 의의 / 한계
연구 의의	- 비영리 부문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 - 국내 최초로 비영리 부문의 GRDP 기여도 및 산업연관분석 실시 -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종합적으로 규명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 구축	- 비영리 일자리의 공공적 가치 제고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모델의 확산 가능성 확보 - 비영리를 지역경제의 구성요소로 재조명 - 실증 근거 기반의 정책 연구 모델 제시
연구 한계	비영리 범위 설정 :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포괄한 확장된 정의 사용	현장 인식과 괴리 가능, 해석상의 논란 존재
	통계 자료 제약 : 국가공식 비영리통계 부재로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추정	누락·분류 오류 가능성, 신뢰도 한계
	정책 실효성 한계 : 중앙정부 차원의 독립적 비영리 일자리 정책 부재	지방정부 중심의 제안 실효성 제약
	적용 범용성 제한 : 경기도 사회·경제적 맥락 반영 모델	타 지역·국가 일반화 적용의 한계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실행방안/정책 시사점
향후 과제 및 종합 제언	비영리 통계 기반 강화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와 외부 등록정보 연계 협의체 구축 - UN 비영리 위성계정(UN Handbook) 기준 재도입 및 국제코드 매핑 추진, 비영리 식별코드 부여
	사회경제적 효과 검증 체계화	- 돌봄·교육·문화예술·환경 등 세부영역별 분석 - 공공·민간 부문과 비교 연구 확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보조금사업 인건비 인정 제도 개선 : 상근자 인건비·운영비를 정당한 사업비로 명시 - 행안부 집행지침 개정 필요(상위법과의 불일치 해소)
	협력적 거버넌스 및 사회적 대화	- 중앙·지방정부 협력, 민간·학계 공동연구 확대 - 시민사회·기업·정부 간 다자 대화체 마련
	청년 공익활동가 정책 강화	청년활동가를 시민사회 기반의 핵심 주체로 육성
	AI와 비영리 일자리 대응	- AI 활용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완화 정책 필요 - 인간적 돌봄·공감 등 비대체 영역 중심의 역할 재정립
	기본사회 및 기본소득 연계	기본소득(경제 안정) + 비영리활동(사회참여)의 결합 모델 추진
	일의 패러다임 전환	일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 강조